

2020년 서울시(보훈청 등) 사회 문제 및 해설(B책형) (2020.06.13.)

정치와 법 2~3, 7~10, 12, 14~15, 18,
20번(11문제)
사회·문화 1, 4~6, 11, 13, 16~17,
19번(9문제)

1. <보기>의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환경부에서 ㉠ 멸종 위기 야생 생물로 지정한 열목어는 연어과 의 민물고기로 ㉡ 산란기가 되면 온몸이 짙은 홍색으로 변한다. 열목어 개체 수가 급감하자 여러 기관에서는 인공 증식한 열목어를 방류하는 등 ㉢ 열목어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불가치적,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연 현상 vs 사회·문화 현상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과 ㉢은 사회·문화 현상, ㉡은 자연 현상입니다.

- ① (X)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인간의 가치가 개입됩니다(가치 함축적). 반면,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인간의 가치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불가치적). ㉠과 ㉢은 모두 사회·문화 현상으로서 가치 함축적입니다.
- ② (O) 확실성의 원리는 인과 관계에 예외가 없어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 현상(㉡)의 특징입니다. 반면,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 관계는 존재하지만, 동일한 조건이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률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 ③ (X)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 법칙, 자연 현상(㉡)은 존재 법칙이 적용됩니다. 당위 법칙은 사회 현상이 '마땅히 ~ 해야 한다'와 같은 인간의 규범적 요구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존재 법칙은 자연 현상이 인간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④ (X) 보편성과 특수성이 모두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 ㉢)과는 달리 자연 현상(㉡)은 보편성만을 특징으로 합니다.

2.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원칙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 불문법인 관습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다.
- ②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 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 ③ 명확성의 원칙 -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④ 소급효 금지의 원칙 - 범죄 행위 당시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없었으나 범죄 행위 이후에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제정되었다면 반드시 소급하여 처벌해야 한다.

[정답] ④

[출제단원] 정치와 법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죄형 법정주의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법률주의)은 범죄와 형벌은 문서로 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불문법인 관습법을 근거로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② (O)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률 규정이 없을 때 법관이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③ (O) 명확성의 원칙이란 입법자는 금지되는 범죄 행위와 형벌의 내용을 국민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법률에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률에는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와 그 범죄에 부과되는 형벌이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④ (X)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행위 전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후 입법으로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그런데 범죄 행위 당시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없었으나 범죄 행위 이후에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제정된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보기>의 밑줄 친 「헌법」상 기본권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보 기>

갑(甲)은 과거 시민단체에서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는데, 국가 기관이 갑(甲)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정당 및 사회 활동, 대인 접촉 관계, 집회 또는 시위 참가 활동 내역 등을 수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A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갑(甲)은 B를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근교로 이사를 갔지만 주변 공장으로 인한 환경 공해와 자동차 행상들의 확산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공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껴 C 역시 침해 받고 있다.

- ① A는 소극적·열거적 성격의 권리이다.
- ② B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 ③ C는 민주주의 이념 중 하나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다.
- ④ A는 B와 C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정답] ②

[출제단원] 정치와 법 - 1. 민주 정치와 헌법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A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되므로 '자유권', B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제기과 관련되므로 '청구권', C는 환경권과 관련되므로 '사회권'에 해당합니다.

- ① (X) 자유권(A)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서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소극적 권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권(A)은 천부적·초국가적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은 물론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까지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열거적 성격의 권리는 아닙니다.
- ② (O) 청구권(B)은 국가에 특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입니다. 또한 청구권(B)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입니다. 이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또는 '절차적 기본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 ③ (X) 신체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는 것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권'과 '평등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는 '사회권'에 해당하므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④ (X) ②번 해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A)이 아니라 청구권(B)에 대한 설명입니다.

4. <보기>의 (가), (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개개인의 능력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곳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배치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뛰어난 직원도 지금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조직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더 시급 합니다.

- ① (가)는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 ② (나)는 사회 명목론이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사회의 독자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실재론 vs 사회 명목론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가)는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전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에 해당합니다. (나)는 현재의 조직 문화 속에서 개인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집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에 해당합니다.

- ① (X)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나)의 입장입니다.
- ② (X) (나)는 사회 실재론에 해당합니다.
- ③ (O)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 명목론(가)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 ④ (X) 사회 실재론(나)에서는 사회는 개인들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5.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관료제는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강조한다.
- ②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 ③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 ④ 탈관료제는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중시한다.

[정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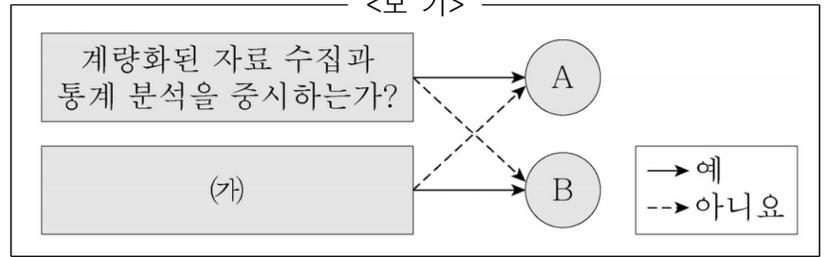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관료제 vs 탈관료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 ② (X) 연공서열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나 지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관료제는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반면, 관료제는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합니다.
- ③ (X) 탈관료제와 관료제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운영 체계로서, 탈관료제와 관료제 모두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 ④ (X) 관료제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표준화하여, 구성원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중시하는 것은 관료제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6. <보기>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A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강조한다.
- ② B는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 ③ A는 방법론적 일원론, B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 한다.
- ④ (가)에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실증적 연구 방법 vs 해석적 연구 방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계량화된 자료 수집과 통계 분석을 중시하는 연구 방법은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따라서 A는 실증적 연구 방법, B는 해석적 연구 방법에 해당합니다.

- ① (X)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은 해석적 연구 방법(B)입니다.
- ② (X)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법칙을 발견하는 연구 방법은 실증적 연구 방법(A)입니다.
- ③ (O) 실증적 연구 방법(A)은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의 연구 방법이 같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해석적 연구 방법(B)은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하는 목적과 방법도 서로 달라야 한다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합니다.
- ④ (X) '경험적 관찰'은 연구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실증적 연구 방법(A)과 해석적 연구 방법(B)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을 조사하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연구합니다. 즉, 두 연구 방법 모두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7. <보기>의 근대 사회 계약론자 갑(甲), 을(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 갑(甲) : 자연 상태는 강제할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일종의 전쟁 상태이고,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생명의 위협에 처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 자연권을 포기하고 각 사람이 가지는 힘을 모아 좀 더 큰 집단적 힘을 가지는 정치 사회를 만든다.
- 을(乙) : 사람들이 계약에 따라 사회를 이룩한 것은 자연 상태에 대한 절망에서가 아니라 불편함 때문이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물을 지키는 데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계약의 절차를 밟아 통치자를 세우는 데 동의하고, 또 통치자에게 자연권을 위임하는 동시에 자연권의 보호를 맡긴다. 통치자와 국민의 관계는 동의와 신탁 위에서만 성립한다.

- ① 갑(甲)은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 ② 을(乙)은 국가 권력은 위임 목적에 맞게 행사되도록 분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甲)과 달리 을(乙)은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다.
- ④ 갑(甲), 을(乙) 모두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한다.

[정답] ②

[출제단원] 정치와 법 - 1. 민주 정치와 헌법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갑은 자연 상태를 일종의 전쟁 상태로 보고, 개인이 자연 상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했다는 것이므로 '홉스'에 해당합니다. 을은 잠재적 투쟁 상태를 극복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창설하고 개인이 가지는 권리의 일부를 국가에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로크'에 해당합니다.

- ① (X)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할 경우 국민이 국가를 부정할 권리란 '저항권'을 말합니다. 홉스(갑)는 군주가 실령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도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 저항권을 부정했습니다.
- ② (O)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 분립을 통한 국가 권력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입법권 우위의 2권 분립)를 주장한 자는 로크(을)가 맞습니다.
- ③ (X) 인간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이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일반 의지'입니다. 계약을 통해 수립된 국가는 이러한 일반 의지의 명령에 따라 통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자는 '루소'입니다.
- ④ (X) 홉스(갑), 로크(을), 루소와 같은 사회 계약론자들은 모두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즉,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천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8. <보기>의 밑줄 친 ㉠~㉣ 중 혼인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혼인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진다. 「민법」은 혼인하였다도 ㉠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소유·관리·처분하는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 일상의 가사에 대해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다. ㉣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부부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②

[출제단원] 정치와 법 - IV.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혼인의 효과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O) 민법은 부부재산에 관하여는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 즉 그의 단독재산이며(제830조 제1항), 이러한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하게 됩니다(제831조).

㉡ (X)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30조 제1항). 이때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를 대법원은 '추정'으로 해석합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반대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번복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간주'라는 것은 반대사실을 입증하더라도 간주된 효과를 번복시킬 수 없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추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효과를 갖는 간주로 보기 위해서는 법에서 "~로 간주한다." 또는 "~로 본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간주한다).'가 아니라,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또는 추정한다).'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만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금의 일부씩을 부담하여 매수하거나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 것과 같은 유형적 기여가 있다면 그 명의와 상관없이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O) 민법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27조 제1항). 이를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 (O)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32조). 이를 일상 가사 채무의 연대책임이라고 합니다.

9. <보기>의 밑줄 친 ㉠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보 기>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헌법의 목적은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정치가나 관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 의회에서 어떤 특정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그 법안이 헌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함부로 헌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헌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정되는 것이 아니며,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① 탄핵 심판
- ② 권한 쟁의 심판
- ③ 위헌 법률 심판
- ④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정답] ③

[출제단원] 정치와 법 - II. 민주 국가와 정부

[출제영역] 헌법 재판소의 권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밑줄 친 ㉠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말합니다.

- ① (X) 탄핵 심판이란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서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 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 재판을 말합니다. 이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② (X) 권한 쟁의 심판이란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에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 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역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③ (O) 위헌 법률 심판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써 밑줄 친 ㉠과 관련한 제도가 맞습니다.
- ④ (X)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에서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 재판을 말합니다. 이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0.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사례 발표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보 기>

사회자 : 노동 관련법 위반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갑(甲)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임금을 주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매출이 많을 때 주다 보니 임금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기도 합니다.
- 을(乙) : 제대 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일합니다. 일이 많아서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합니다.
- 병(丙) :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자라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 정(丁) :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경영 계획에 반대하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단체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 ① 갑(甲)
- ② 을(乙)
- ③ 병(丙)
- ④ 정(丁)

[정답] ④

[출제단원] 정치와 법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근로자의 권리 보호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본문). 따라서 갑이 다니는 회사에서 비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② (O)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50조).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제55조 제1항). 을은 휴일 없이 일주일 내내 하루 12시간씩 일한다고 하였으므로 1주간 근로시간이 84시간(=12시간 X 7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일도 없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③ (O)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또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따라서 병이 다니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사유로 여성을 차별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④ (X) 단체 교섭이란 근로자가 단결하여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이 다니는 회사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사업 영역 확장과 관련된 경영 계획에 반대하며 단체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보기>의 (가)와 (나)가 각각 나타내는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생계, 의료 등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나)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부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① (가)가 속한 유형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나)가 속한 유형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 ③ (가)가 속한 유형은 (나)가 속한 유형과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 ④ (나)가 속한 유형은 (가)가 속한 유형과 달리 수혜 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 -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가)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공공 부조'에 해당합니다. (나)는 국민 연금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 보험'에 해당합니다.

- ① (X) 공공 부조(가)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서비스입니다.
- ② (O) 사회 보험(나)은 사전 예방적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 ③ (X) 공공 부조(가)와 사회 보험(나)은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만, 공공 부조(가)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사회 보험(나)은 상호 부조의 원리에 따라 가입 대상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공공 부조(가)에 비해 사회 보험(나)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습니다.
- ④ (X) 사회 보험(나)은 수혜의 정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과 같은 부담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공 부조(가)는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12. <보기>에서 이익 집단의 순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함

ㄴ. 특수 이익이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ㄷ.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출이 가능함

ㄹ. 정치권력과 결탁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음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②

[출제단원] 정치와 법 - III. 정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이익 집단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이익 집단이란 구성원들이 집단의 특수한 목표와 이익을 공공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반영되도록 정치 과정에서 이익을 표출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결사체를 말합니다.

- ㄱ. (O) 이익 집단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하여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는 이익 집단의 긍정적 기능에 해당합니다.
- ㄴ. (X) 이익 집단이 추구하는 집단 이익(특수 이익)이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공익)과 충돌할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익 집단의 부정적 기능에 해당합니다.
- ㄷ. (O) 국민들은 이익 집단을 통하여 자신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익 집단의 긍정적 기능에 해당합니다.
- ㄹ. (X) 집단의 특수한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 정치권력과 결탁할 경우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익 집단의 부정적 기능에 해당합니다.

13. <보기>는 갑(甲)국~병(丙)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국~병(丙)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 기>

<갑(甲)국~병(丙)국의 계층 구성 비율>

(단위 : %)

구분	갑(甲)국	을(乙)국	병(丙)국
상층	20	20	15
하층	50	20	75

- ① 갑(甲)국의 계층 구조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 ② 을(乙)국의 계층 구조는 전근대적 신분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 ③ 병(丙)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 ④ 갑(甲)국보다 을(乙)국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계층 구조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제시된 표에서 갑, 을, 병국의 중층 비율을 구하고, 이에 따라 각 국가의 계층 구조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구분	갑국	을국	병국
상층	20	20	15
중층	30	60	10
하층	50	20	75
계층 구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 ① (X) 양극화 현상은 중간 계층의 비율이 가장 적고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병국'의 계층 구조에서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 ② (X) 전근대적 신분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입니다. 하층의 비율이 가장 높고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갑국'의 계층 구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 ③ (X) 병국의 계층 구조는 중층의 비율이 가장 낮고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하층이 존재하는 '모래시계형'에 해당합니다.
- (O) 중층 비율이 높으면 계층 간 위화감이 덜하고 중층이 상층과 하층 간의 완충 지대가 되기 때문에 사회 안정이 실현되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중층의 비율이 높은 '을국'의 계층 구조가 갑국보다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데 유리합니다.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민주 선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존의 3 대 1을 기준으로 삼았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인구 편차 허용이 (㉠)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① 모든 유권자의 투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
- ② 유권자가 자유 의지에 의해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
- ③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
- ④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

[정답] ①

[출제단원] 정치와 법 - III. 정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 상하 50%(최대 150% : 최소 50% = 3 : 1)를 기준으로 삼았던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 이와 같이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과도한 경우에는 「평등 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은 '평등 선거의 원칙'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이 판례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 편차의 허용 기준은 상하 $33\frac{1}{3}\%$ (최대 $133\frac{1}{3}\%$: 최소 $66\frac{2}{3}\%$ = 2 : 1)를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① (O) 평등 선거의 원칙이란 차등 선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 사람이 행사하는 투표의 「수」와 「가치」가 대표자 선정에 기여하는 정도에 있어서 서로 동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② (X) 유권자가 자유 의지에 의해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은 '자유 선거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자유 선거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③ (X)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 ④ (X)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은 '보통 선거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15. 「민법」상 유효한 법률혼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다른 사람과 이미 혼인이 되어 있는 중혼이어도 상관없다.
 - ㄴ. 혼인 당사자 모두 만 19세 이상이어야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 ㄷ. 혼인 당사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혼인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 ㄹ. 혼인 당사자들은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혼인할 수 없는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④

[출제단원] 정치와 법 - IV.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혼인의 성립 및 유효 요건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ㄱ. (X) 중혼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여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810조). 만약 이 규정에 반하여 중혼을 한 경우에는 뒤에 이루어진 혼인(후혼)에 대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6조 1호). 따라서 민법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혼이 되기 위해서는 ‘중혼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ㄴ. (X) 민법은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하여 혼인적령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07조). 따라서 혼인 당사자 모두 만 19세 이상이어야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18세인 미성년자도 혼인적령에는 도달했으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이 가능합니다.

ㄷ. (O)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음에도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혼인은 무효입니다(제815조 1호).

ㄹ. (O)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등 일정한 범위의 친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809조). 만약 이 규정에 반하여 근친혼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제815조 2호, 제816조 1호). 따라서 민법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혼이 되기 위해서는 ‘근친혼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6. <보기>의 (가)~(다)에 각각 해당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가) 사회 구성원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다.
 - (나) 문화는 세대 간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풍부해진다.
 - (다) 여러 문화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으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 ① (가)는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한 바탕이 된다.
 ② (나)는 문화 요소들의 연쇄적 변동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③ (다)는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④ (가)는 변동성, (나)는 공유성, (다)는 전체성이다.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I.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의 속성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가)는 문화의 공유성, (나)는 문화의 축적성, (다)는 전체성(총체성)입니다.

① (O)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들은 문화의 의미를 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 작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문화의 공유성(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② (X) 문화의 한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문화의 전체성(다)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③ (X) 문화의 공유성(가)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생활 양식을 뜻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 끼리는 원활한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회와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④ (X) (가)는 공유성, (나)는 축적성, (다)는 전체성입니다.

17. <보기>의 사회 변동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 사회는 단순하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를 향하여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낡고 비합리적인 것에서 새롭고 합리적인 것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진보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 ① 변동과 발전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 ② 운명론적인 입장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이해한다.
- ③ 단기간의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 ④ 지난 역사 속에서 반복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V.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관점 - 진화론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제시문은 '사회 진화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① (O) 진화론은 모든 사회는 일련의 발전 단계에 따라 발전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사회 변동은 곧 발전과 진보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② (X) 운명론적인 입장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이해하는 관점은 '순환론'입니다. 순환론은 인간의 생애처럼 사회도 결국 생성, 성장, 쇠퇴를 되풀이한다고 보았습니다.
- ③ (X) 순환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변동의 순환을 설명하는 관점으로, 단기간의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진화론이 아닌 '순환론'의 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④ (X) 지난 역사를 근거로 하여 문명의 흥망성쇠와 같은 반복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관점은 '순환론'입니다.

18. <보기>의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A는 국가 작용이 그 내용에 상관없이 의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 명목상 법률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B는 자연법, 정의의 원칙, 이성과 기본적 인권에 반하지 않는 요소를 강조하며 법적 형식을 온전히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정당한 법률에 따라 공권력이 행사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라고 본다.

- ① A는 법의 제정 절차보다 목적을 더 중시한다.
- ② B는 A와 달리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 ③ B와 달리 A는 기본권 제한 시 법률적 근거를 필수요소로 본다.
- ④ B의 실현 수단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도가 있다.

[정답] ④

[출제단원] 정치와 법 - 1. 민주 정치와 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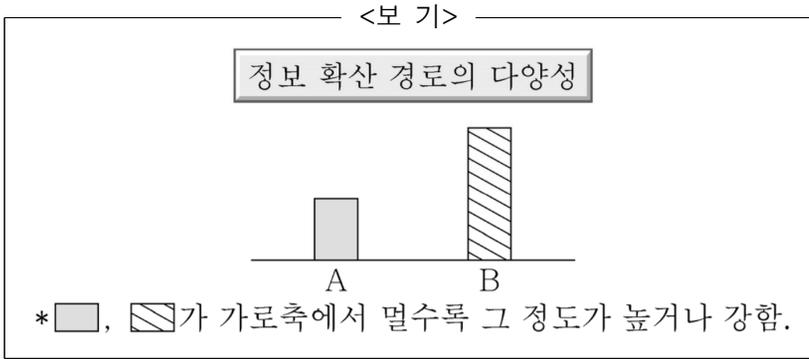
[출제영역]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A는 형식적 합법성을 갖추는 것만으로 법치주의가 완성된다는 입장인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반면, B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 ① (X) 형식적 법치주의(A)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보다 제정 절차의 합법성만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 ② (X) 형식적 법치주의(A)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중시하는 입장이고, 실질적 법치주의(B)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법률의 목적과 내용까지도 정의에 합치할 것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 ③ (X) 기본권 제한을 함에 있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A)와 실질적 법치주의(B)의 공통점입니다. 실질적 법치주의(B)는 이에 더하여 해당 법률의 목적과 내용까지도 정의에 합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④ (O) 실질적 법치주의(B)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위헌 법률 심사 제도나 권력 분립 제도 등이 있습니다.

19. <보기>는 대중 매체 A, B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뉴 미디어와 인쇄 매체 중 하나이다.)



- ① A는 B에 비해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이 쉽다.
- ② A는 B에 비해 쌍방향적 정보 전달이 유리하다.
- ③ B는 A에 비해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 ④ B는 A에 비해 정보 전달의 속도가 느리다.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V.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대중 매체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뉴 미디어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쌍방향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 확산 경로가 다양합니다. 반면, 인쇄 매체는 정보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뉴 미디어에 비하여 정보 확산 경로의 다양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A는 인쇄 매체, B는 뉴 미디어입니다.

- ① (X)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이 용이한 매체는 뉴 미디어(B)입니다.
- ② (X) 인쇄 매체(A)는 정보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일방향적 매체). 반면, 뉴 미디어(B)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양방향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 매체입니다(쌍방향적 매체).
- ③ (O) 뉴 미디어(B)는 대중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한 매체는 뉴 미디어(B)입니다.
- ④ (X) 인쇄 매체(A)는 사람에 의해 물리적인 배달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보 전달의 속도가 느립니다. 반면, 뉴 미디어(B)는 정보를 쉽게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대량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20. <보기 1>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1>

법률안의 제출은 의회 의원만이 할 수 있다. 행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여당 의원들을 통하여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다만,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 기2>

ㄱ.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ㄴ.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ㄷ. 대통령과 의회 의원의 선거가 각각 실시된다.
 ㄹ.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이원화되어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①

[출제단원] 정치와 법 - II. 민주 국가와 정부

[출제영역] 대통령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지 않고, 대신 행정부의 수반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는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입니다.

ㄱ. (O)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게 됩니다. 반면,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경우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에 해당합니다.

ㄴ. (X)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경우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 결의를 하면 내각의 구성원인 수상과 각료들은 총사퇴를 하게 되는데, 이를 내각이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특징입니다.

ㄷ. (O)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경우 국민이 대통령과 의회의 의원을 따로 선출하여 행정부와 입법부를 각각 구성합니다. 반면,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경우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 의원을 선출하면 의회에서 다수당의 당수를 수상(총리)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의회 의원의 선거가 각각 실시되는 것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ㄹ. (X)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함께 갖습니다. 이를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일원화」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경우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즉,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인 국왕이나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총리)이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권한을 갖습니다. 이를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이원화」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입니다.